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371
----------	-----

발의년월일 : 2008년 7월 28일

발 의 자 : 박희진의원 외 11인

1. 주 문

금번 일본문부과학성의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온 천하에 들어낸 것으로 우리 대전시민 모두는 독도 영유권 표기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임.

나. 이에 150만 대전시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함.

- 1)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명기한 독도 영유권 문구 표기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며,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함.
- 2)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침탈 야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함.
- 3) 우리 대전시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음모와 만행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지난 7월 14일 일본문부과학성의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온 천하에 들어낸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 대전시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삼천리 금수강산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망동은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시켜 편협한 세계관을 고착화시킴으로써 한·일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킴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어 중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렇듯 철없고, 무모한 망동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임에 우리 대전시민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기인한 독도 침탈 야욕을 우리 민족에 대한 악의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망각한 채, 혼동을 획책하려는 일본의 망동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막아 낼 것이다.

이에 150만 대전시민 모두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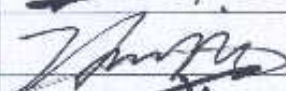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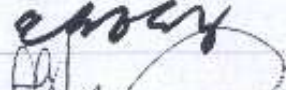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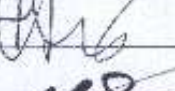



1.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명기한 독도 영유권 문구 표기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
1. 일본 정부는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왜곡 없이 객관적이면서도 거짓 없이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침탈 야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150만 대전시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음모와 만행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8. 7. 29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찬성 의원 서명

의원명	서명	비고
박희진		
강재경		
김영환		
송재용		
북정환		
천형혜		
양승민		
유영배		
김희홍		
이준홍		
박학원	